

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이천시(2001. 6. 28 제출)

2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
- 나.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(영 제107조)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기업용재산으로 “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, 기타 시설물”과 행정재산 보존재산 “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, 용도폐지”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토록 추가하였음(안 제6조제2항)
- 라. 영 제84조제3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·처분의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생략하도록 추가함(안 제64조제3항)
- 마.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,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대부·매각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18조의 3)
- 바.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경감토록 함(안 제22조제9항)

- 사. 공유재산의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을 “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”과 “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”으로 하도록 함(안 제25조의2제1항)
- 아. 변상금 부과·징수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,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도록 함(안 제28조의2)

4. 관련 법적근거

○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함

5. 검토의견

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○안제4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

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, 연간사용료, 납부방법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위탁관리 체제를 구체화 하고자 함.

○안제5조 제4항은

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,(1항~3항) 영제107조에서 동사항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 혜택을 받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○안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

안제6조제2항 제2호 제3호는 법령에서 신설(2000. 10. 20)되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제6조 제3항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심의에서 생략토록 함.

○안제19조의 3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은

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 유치를 한 경우만 적용토록 하였음.

○안제21조 제4항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

제1호내지 제4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제1호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, 동 규정에 연 3%내지 8%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(제5호)의 이자를 정 하였음.

○안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

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,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이상, 1000분의 25이상, 1000분의 10이상등으로 되어 있어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 있게 하였으며,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여 제8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임.

○안제22조의 2는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범위를 확대하는등 자귀를 수정하였음.

○안제25조 제2항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(제48회-자치행정위 제1차)

○안제25조의 2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(2000. 10. 20)하여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정하였음.

○안제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문 정리를 하였음.

○안제2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, 제7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음.

○안제28조의 2 변상금의 사전통지등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를 준용하여 개정 하였음.

○안제38조 제5항 제3호의 중단의 개정은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 하도록 하였음.

○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자치법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정리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